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교육감 선거 '득표수 누락' 전북선관위, 위원장에 나흘 뒤에야 '능력 보고'	정치	
2	중동 불안에 AI주 차익실현, 인플레 우려까지...나스닥 2%↓	경제	

(1)기사/뉴스요약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개 투표소의 개표 결과 누락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선관위원장에게 나흘 뒤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유의 사태에도 상황 인식이 안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제1투표소의 전북교육감 투표 결과가 누락된 사실을 이틀 뒤인 지난 5일 파악했다. 개표가 마무리되고 선거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중대 오류를 확인한 것이다. 현장 투표관이 중화산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제1투표소 개표 결과로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 투표 상황을 기록하는 투표록 내지에 제3투표소를 제1투표소로 오기한 상태로 개표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제1투표소에서 실제 투표한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개표 집계에서 빠졌다.

전북도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개 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동일한 것을 보고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다. 개표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5일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전북도선관위원장은 지난 9일에야 실무진에게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업무 처리도 있고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느라 지난 9일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에도 보고 단계가 있다”며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선관위 측은 ‘중대한 오류에도 보고가 지연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답변드렸다”고 했다.

전국 각지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관리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전북도선관위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정권자인 전북도선관위원장의 현안 파악이 늦어지며 제때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전북도선관위는 전날 언론 보도로 집계 오류 사실이 처음 알려지기 전까지 외부에 이를 공표하지도 않았다. 교육감 후보자들도 오류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집계 오류로 누락된 투표수가 전북교육감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지만, 초유의 사태로 선관위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요약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누락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나흘 뒤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투표관이 중화산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제1투표소 개표 결과로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업무 처리도 있고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느라 보고가 늦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기사/뉴스요약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인공지능(AI) 반도체·기술주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10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53.33포인트(1.87%) 내린 4만 9918.7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19.66포인트(1.62%) 내린 7266.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09.32포인트(1.98%) 내린 2만5169.50에 각각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AI 관련주 고평가 우려에 이어 중동발 악재가 터지면서 3주 만에 첫 이틀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들이 다시 큰 폭으로 내리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3.4%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7% 떨어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6% 내렸다. 특히 AI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는 부품 구매 자금 조달을 위해 70억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 계획 발표 이후 23.1% 폭락했다. 오는 12일 예정된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동 정세 불안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밤사이 이란과의 교전을 언급하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이날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강력 맞대응 방침을 밝히며 위기감이 커졌다. 양국 충돌 우려에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1.80% 오른 배럴당 93.10달러에,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2.07% 오른 90.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시장의 인플레이션 경계심을 자극했다. 미국 5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2% 올라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9% 오르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유가 상승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자산 가격에 선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 증시가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인공지능 주식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 인플레이션 경계심 증가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30은 1.87% 하락했고, S&P500은 1.62%, 나스닥 종합지수는 1.98% 하락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2%올라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중동 정세 불안도 다시 격화되며 국제유가가 상승 마감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근원 CPI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항목을 제외해 산출한 물가 지표를 뜻한다.	
2	빈볼	빈(Bean)은 미국에서 사람의 머리를 가리키는 은어로, 투수가 타자의 머리를 향해 의도적으로 던지는 공을 가리키는 말이다.	야구상식사전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부정선거 선 그은 대학생들의 6·10 시국선언 / 정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민주화 이후 사회적 발언과는 거리를 두어온 대학생들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드문 일이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일부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이 중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이들의 요구는 상식적이고 타당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는 해법의 큰 줄기 또한 이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여야는 지난 9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고, 검찰·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수사로 부족하면 특검을 도입하고,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도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도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대학생들이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 일주일간 분출한 대학생들의 규탄 목소리를 학생 대표기구인 총학생회가 공식적으로 대의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본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극우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은 부정선거론, 계엄옹호론 등 비상식적 주장과 선을 긋고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환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날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다. 총학생회들이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한 건 민주화의 전환점이 된 1987년 그날의 상징성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참정권은 절대 침해돼선 안 될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시민들이 윤석열의 12·3 내란을 목숨 걸고 막은 것도 참정권을 포함한 시민들의 정치적·사회적 권리 일체를 박탈하려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최소요건이다. 여기에 더해 시민 누구도 차별·배제·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더 깊고 넓은 공론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